

저희는 국립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50여만원을 병원비로 낼 수 있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월 1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민간위탁은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민간병원에서의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면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단순히 공무원 수 줄이기나,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43만 결핵환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1998년 4월 22일 배상훈 환자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의 축소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대해진 관료사회를 재정비해 남는 인력과 재정이 사회복지로 재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230여 입원환자들은 43만 결핵환자의 치료기관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린 정개위의 결정에 그저 황당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3월 23일 김대중대통령께 알수록 보내는 청원서 중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 관련소식

찬우물(나우누리): go cw → 15번 투쟁속보란

공대위 연락처

서울 02) 774-8774 민중의료연합

인천 032) 863-7064 새날청년회

광주 062) 220-4040 전남의대학생회

자본의 이윤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19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정개위)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환자비상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여러 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학생단체들이 연대하여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작년 1년동안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민간위탁 방침이 거의 철회되는 듯 했으나, 보수정치인들은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회를 수개월간 공전시키더니, 마침내 열린 지난 1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오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가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전남의대학생회, 조선대학생연대, 전남대학생연대회의 '저항과 연대', 청년진보당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부, 민중사랑 청년연대, 진보정치 포럼, 민중의료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해맞이 모임)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리나라의 결핵상황

■ 한국의 결핵상황은 아직 후진국 수준!

- 한국의 결핵 유병율은 1.3%로 OECD회원국중 1위
- 한국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중 9위, 전염병중에서 유일하게 10위안에 포함
- 전체 결핵환자수는 43만명, 이중 한해 평균 4천명이 사망
- 전라남도만 해도 도내 7만여명의 환자중 매년 4백명이상이 사망

■ 방지되는 결핵, 확산되는 결핵!!

-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는 보건소 위주이다. 그러나 보건소는 약을 지급하는 역할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결핵의 재발과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결국 난치성 중환자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체계는 크게 보건소, 결핵협회, 국립결핵병원으로 나뉘어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없이 비효율적이고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에는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자를 비롯해 생활조건이 악화된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결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숙자들의 경우 치료 및 관리가 불가능하여 이들에 의한 결핵의 확산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려 하는가?

민간위탁 결정의 공식근거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한 정부 부처 등도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정부가 얼마나 주목구구식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당시 IMF구제금융으로 경제논리가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되었고,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을 단행
-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가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짐
- 영리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자만 누적되는 병원으로 판단
- 우리나라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보건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입지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로비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어떤 곳인가?

- 1962년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개원하여 이 지역 결핵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 매년 7만여명의 입원환자와 3천여명의 외래환자에게 무료로 가까운 진료를 함으로써, 결핵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저학력의 극빈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내성이 생기거나 초치료에 실패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난치성 환자들이 주로 입원, 요양하고 있다.
- 3대 국립결핵병원 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서부권(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결핵환자를 치료해왔다.

왜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가!

■ 민간위탁은 이 지역 영세계층에 대한 결핵치료를 포기하는 일이다!

현재 입원환자의 70% 이상이 전남인근 도서지역의 주민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보건소 초치료 실패자로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극빈계층이다. 병원이 민간에 의해 운영될 경우 진료비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 영세결핵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 영리추구에 혈안이 된 지역 유지들에 의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결핵이라는 전염병을 관리하고 영세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경영의 특성상 병원이 이윤추구를 위해 다른 질병치료 기관으로 변모할 것이고, 수익성이 적은 결핵환자는 결국 병원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해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결핵병원을 위탁받기 위한 지역 유지들의 로비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이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돈과 바꿀 수 없듯이,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논리 곧 자본의 논리만으로 제단할 수 없다. 사회복지혜택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 더구나 극빈층이 늘어나고 있는 IMF시대에 사회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위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이 남는 '경영'을 해야 하겠지만, 국가는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라면.

IMF 이후에도 민중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정세글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IMF 세계자본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움켜쥐고 총체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리가 없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전세제는 금세기 마지막의 축제라는 프랑스 월드컵의 열풍이 휩쓸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은 월드컵을 빌미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IMF 구호체제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에서도 민중의 생존권을 향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에게 있어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무슨 의미이며,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생존권이라는 기본권과 맞물려 작은 혼란으로 다가온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 몇번을 강조해도 싫지 않는 소외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 국민정부를 자처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정부답게 개혁과 민주주의 의지를 불태웠다.

정권이 출범한지 4달이 지난 지금, 신정부가 자신들의 준비된 의지만큼 국민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되짚어 보면,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이고 수구세력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권초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도원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전개될 국민정부의 민중탄압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는 철거민을 내몰기 위해 정부는 골리앗 탑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사람마저 불에 태우는 등의 상상을 초월한 폭력을 방조하고 목인했다.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적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5.1절 집회의 폭력적 대응과 노동자, 학생연대의 엄단! 발표였다. 이는 이전 역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믿었던 구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00만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들의 참혹한 생활이 뉴스거리가 아닌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를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요구와 정리해고 반대는 생존이 달린 정당한 요구이다.

LG 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의 중장기 실업전망 보고서를 보면 IMF 체제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가 민성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위기하에서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필수적이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투쟁이 외자유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문제삼았다.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은,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해체와 총수의 재산환수 조치, 전체예산의 25%에 달하는 국방비 축소등 정부예산의 생산적인 분배는 생각지도 않고 달려라고는 만져보지도 못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국민들의 과소비때문이라며 경제위기를 대다수 국민들의 소

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후 발생하는 자생적인 투쟁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업의 무리한 외국자본유입과 부채경영,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조기대응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또한 정리해고제 도입, 공공지출의 삭감, 정부부문의 축소, 사회복지제도 축소로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진영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쟁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축소를 빌미로한 국민보건복지사업의 축소와도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진영의 당면 투쟁을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획득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930년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실질임금의 삭감없는 대폭적인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일대 격돌 시작!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 노동공유를 기억했으면 한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해고의 자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이라 여겨진다. 무엇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응 방법인가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대응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앞서 김대중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국민이 어느 한가지 부문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전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률과 유병률 1위이고 인구의 일본, 중국, 태국보다도 낙후된 결핵관리에 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결핵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 법령정비를 뒤로 한 채 체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자본논리로 국립목포결핵병원같은 특수목적 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가 국민정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 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IMF! 이제 시작이다. 제국주의 패권 전쟁이었던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그리고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던 이념적 대립을 제3차대전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일대 격돌은 세계 제4차대전이다. IMF 이후에도 민중의 생존권은 지켜야 한다.

1998년 6월 16일
비대위 대표 배 상 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의 동향

- 98년 2월 18일 /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정상) 국립목포결핵병원 '99년중 민간위탁 결정 발표
-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배상훈)
- 3월 5일 / 목포지역 주요현인으로 대두 / 내일신문, 전남매일, 무등일보, 광주일보, 의산신문, 후생신보 언론보도
- 3월 13일 / 국회의원회 보건정책담당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위탁 근거 및 결핵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 3월 17일 / 목포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 각 언론사 2차 보도자료 발송
- 목포합동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향토문화재단, 향토교정의구현목포연합, 목포민주성변회, 목포노동자회, 전교조목포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목포분회, 목포지구총학생회협의회 등 참가, 성명서 발표
- 목포 MBC, KBS 뉴스보도
- 3월 22일 - 24일 / 제 1차 서울상경투쟁 / 보건복지부, 국회의원회 총연담시행문 - 23일
- 서울역 집회, 세계결핵의 날행사(프레스 센터) 선전전 - 24일
- 3월 27일 - 보건복지부 민간위탁문제점 있음을 내용으로 질의에 회신
- 4월 3일 - 7일 / 국회의원회를 위한 거리 선전전 (5일간 - 목포역, 차없는 거리,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 3만 1천명 서명 / 목포지역인사 100인선언
- 4월 11일 / 연세대 [피문] 공연장 - 선전전과 서명전

- 4월 12일 / MBC(목포방송) 취재현장 800 '갈곳없는 결핵환자들' 촬영
- 4월 22일 / 국헌총원집수(국헌회의 : 아성재의원 소개서)
- 각 보사위원에게 서명자의 청원서투전달
- 4월 29일 - 5월 1일 / 광주서명전, 초산대 반자본운동회 '결핵' 참가 / 광주전남 5.1절 전야제 참가(민주노총)
- 5월 15일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대표: 아성오) / 전남대 의대
- 전남대 오월제 참가 - 정치연설
- 5월 27일 - 6월 2일
- 6.4지침선거 - 시의원후보 출마자를 대상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 의정활동서우회 조직 / 45명의 후보로부터 서명남용 / 권아담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회 도의원 2명 서명거부
- 5월 29일 / 김모임장관에게 면담신청서 발송 - 6월 12일까지 통보요구
- 6월 4일 - 16일 / 의정활동 서명자 40명중 15명통 당선 / 목포시의회 목포결핵의민사업준비회 서울상경투쟁준비
- 6월 11 - 12일 / 국회의원회 협조서 발송
- 6월 23일 /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예정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서울 투쟁본부 : 017-276-2109, 목포 투쟁본부 : 0631-280-1266 FAX : 0631-283-2578, 학생모임 : 015-625-0205, PC통신 ID : 전대의대(나우누리)

한달 용돈의 전부인 3천원을 쥐어주며 '민간위탁을 막아달라'는 할아버지에서 맞벌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이 발표된 이후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도대체 왜 환자들과 학생, 사회각계에서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인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왜 제기 되었는가?

- * IMF를 맞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기구와 인력축소를 기하고자 단행
- * 국가 기능의 민영화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을 추구
- * 국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국립결핵병원을 민간병원의 재산성 차원에서 고려하여 적지않은 쌀이 효과 없는 국가기관으로 판단
- * 우리나라 결핵실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국가 보건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입지 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위탁운영 민원이 제기됨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 * 1962년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개원
- * 1983년 국가에서 국립전염병치료 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 개편함
- * 1990년 병원 현대화 과정에 따라 대지 2만여 평에 360병상규모의 신축병원으로 준공
- * 현재 국가 3대 결핵병원 (공주, 목포, 마산)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함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결핵환자를 치료해 왔다.
- * 법정3종 전염병인 결핵의 완전퇴치라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과는 다른 복지시설 차원에서 결핵환자의 구호, 요양을 업무로 하고 있다.
- * 환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저소득 저학력의 극빈층이다.
- * 결핵환자의 진료비를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1일 320원, 1달에 만원이라는 사실상 무료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맺는말

선진국에서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전체예산의 10%정도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단 지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보건 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은 열악한 보건복지정책을 자본의 논리로서 더욱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명확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와 정당한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이 철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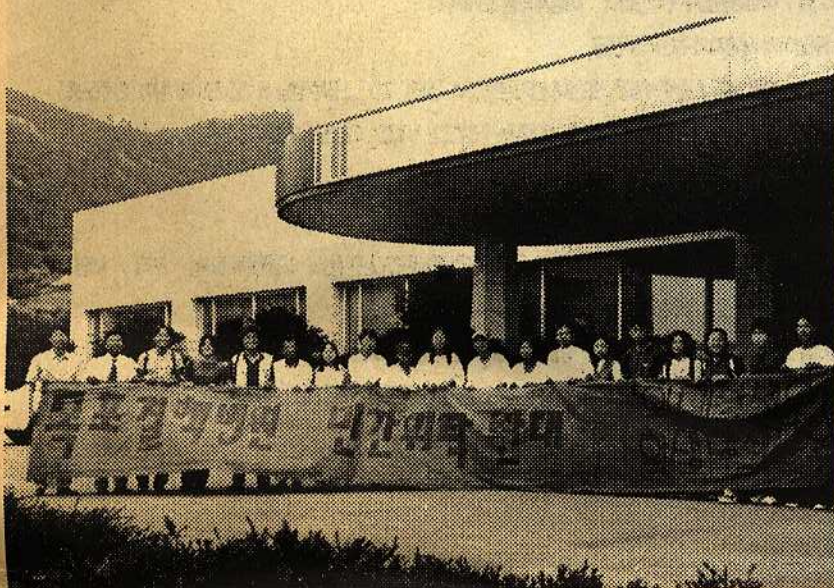
우리는 왜 이 사안에 반대하는가?

1. 결핵의 특성, 치료경과, 유병률 등 우리의 상황

- *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43만여명에 달하며 (유병률 1.3%)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4천여명으로서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 *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와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에서 방치된 1명의 난치성 결핵 환자가 1년에 10-20명의 난치성 결핵환자를 유발할 수 있다.
- * 결핵은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환자 스스로 최소한 7개월 이상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치료경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치료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는 질환이다.
- * 특히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지향하는 민간의 병원 운영으로는 결핵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할것으로 우려되며, WHO에서조차도 결핵사업의 국가적인 관리를 권하는 있는 실정이다.

2. 그간의 국가 결핵 관리

- * 우리나라 국가적 결핵 관리체계는 크게 보건소, 결핵협회와 국립결핵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 보건소는 일차적으로 결핵예방과 결핵환자발굴 및 6개월 초치료를 담당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실태조사 및 결핵검사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결핵병원은 초치료 실패 환자와 난치성 중환자의 구호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자율적인 결핵약 투여가 주된 내용이다. 보건소는 대부분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과 치료약제에 대한 내성균 형성 여부가 방치되고, 재치료 환자나 난치성 중환자로 악화되어 국립결핵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는 전체적인 조망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이 비효율적이고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우리는 결핵관리 사업이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와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시행할 법령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이러한 대안이 없이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이루어지는 국립병원의 민간위탁은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혼동하고 있는 일이며, 사실상 영세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논리적이고 반보건의적인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을 지지합니다!!

- 목포노동청년연대
- 상괏골반 병원 노동조합
-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 목포의료원 노동조합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 YMCA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생모임
- 광주전남보건의약계열학생협의회
- 전남대학교 정학과 연대, 조선대학교 학생연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

생명보다 같은 건강권 확보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속지 않는다.!!

3월 8일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통해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포함한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 재활원등을 책임운영기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철회되고 책임운영기관화되는 것이 그 동안 투쟁의 성과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대위가 책임경영기관화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의 기본 방향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으로써 여전히 경제적 효율에 있음을 정부당국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기초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이 서구의 Agency의 한국식 표현일 뿐이다.

Agency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의 전단계다. 낙후된 경쟁력을 회복하고 채산성을 확보하여 팔기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것은 채산성에 기초한 민간위탁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목표하는 국립의료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방향을 능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리함에도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책임운영기관화 하는 것이 마치 온정을 베푸는 것처럼 치장하는 정부의 태도에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위탁 결정으로 1년이 넘게 싸워온 환자와 제 양심세력은 정부의 조삼모사의 놀음에 절대 휘둘릴 수 없으며, 휘둘릴 생각도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민중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정립하라 !!

1년전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니다. 투쟁의 시작에서는 결핵환자인 것이 부끄럽고, 선처를 바라며 투쟁에 임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폐병쟁이인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선처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히 거부한다.

민중의 건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려하는 작태를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건강을 상품화하여 팔아 먹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국립결핵병원을 위시한 국공립병원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것을..

이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빈곤한 결핵환자가 사람답게 치료받고, 이윤의 논리에서 벗어날때 까지 싸울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려거든 이땅의 노동자· 민중에게 허락을 받아라!

국립결핵병원을 어떻게 만들던 간에 환자들을 납득시켜라!

이윤의 논리로 건강마저 팔아먹고, 천부적 권리인 건강권을 저버리는 정권으로 기억되기 싫다면은 지금 당장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위시한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책임질 것을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재차 요구한다.

1999. 3.24. 제17회 세계결핵의날.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를위한전국공동대책위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민중건강권 쟁취! 공공의료강화! 민중생존권쟁취!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지역 연락처 : 017-276-2109(서울투본)

광주지역 연락처 : 015-625-0205(전대의대)

목포지역 연락처 : 0631-280-1272(목포투본)

통신ID : ictgii(나무누리)

속보란 : go cw 15

농성장위치 : 인천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투쟁지원금보내실곳 : 국민은행 배상훈 552-21-1034-557

참가단체

서울, 인천지역 :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경인지역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민중의료연합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서울대의예과학회(돌팔이), 서울대약학대학생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인천노동정보화사업단, 전국노동단체연합,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국립목포결핵병원환자비상대책위원회

광주지역 :

광주민중의료연합(준)광주전남학생모임, 광주전남보건의료계열대표자회의,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의사회, 광주해맞이모임,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광주전남지부, 민중사랑청년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진보정치포럼, 전남대의과대학생회, 조선대학생연대, 전남대저항과연대, 청년진보당광주지부

목포지역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YMCA, 목포환경운동연합, 청년진보당목포지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결핵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년 4월 28일 한, 노협회와 캐나다 유니테리안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결핵환자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1970년 4월1일 목포아동결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 기관인 "목포결핵병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핵퇴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83년 1월 1일 국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국립전염병 치료시설로 흡수하여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90년 10월 20일 병원현대화 계획에 따라 대지 2만여평에 연건평 3,303평, 360병상규모 신축병원으로 준공(대통령 공약사업)되어 의료인력 57명, 기타행정직원 33명으로 구성된 결핵전문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연 인원 7만여 명의 호남지역 및 도서벽지 결핵환자의 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3대 결핵병원(공주, 목포, 마산) 중 1997년 공주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과 동시에 폐쇄됨에 따라 현재 국립목포결핵병원은 우리나라 서부권(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국가기관 병원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목포결핵병원에는 초치료 실패환자(7개월-9개월)와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2차 치료 18개월, 난치 경우 18개월 이상)등이 입원해 있고 호남권환자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핵
상황

사망률 . 발병률	OECD국가 중 1위
전체환자수	43만명
국립목포병원병상수(목포, 마산)	1,128병상(목포-360, 마산-768)
매년 결핵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수	4,000명
감염율(전체인구)	58.9%
유병율(전체인구)	1% (100명당 1명)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의 노숙자들 사이에서 결핵유병율	12% (100명당 12명)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 400일

실업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야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일자리를 찾아 공단으로 마찌고바로 수위실을 기웃거리지만, 400만 실업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김대중정부가 친 자본,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를 통치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 앞으로 실업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본진영 역시 정리해고라는 적극적인 방법과 분사제도, 명예퇴직, 안식년제, 축탁제등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를 죄여들어 옵니다.

IMF를 몰고 온 재정경제원과 독점재벌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한 채 출발한 김대중정권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아이들반지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노동자 민중을 정리해고와 퇴출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보장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훌륭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우편, 국가방위, 사법, 교육 등과 같이 공공의 문제로 바라보고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말하는 민간위탁의 당위는 재산성과 인원감축입니다.

어느 정권, 어느시대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의 목적이, 전염병치료 예방사업이 이윤추구였던 사례가 있거나 한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현재 400여일간 명동성당과 서울대의대, 인천 평화센터에 농성장을 꾸리고 민간위탁반대 투쟁을 하고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은 법정3중 전염병을 치료, 예방하는 특수목적병원임을 감안할 때 김대중정부 아래서는 민중건강권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50년 철가방으로 불리는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이 문제가 되어 효율성이 없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국가전염병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벌이에 이용하는 국민정부는 허구이며 그들이 하고자하는 제 2의 건국이 43만 결핵환자와 400만 실업자의 학살로 구축되는 피의 건국이라면 저항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